

민주 광주시의원 여성특구 4곳 확정... 청년은 비례 제한경쟁

남구 제2·서구 제3·북구 제3·광산구 제5선거구 지정 강행
남성 후보 출마 차단 반발...여성단체연합 “젠더 전문성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주시의원 여성경쟁 선거구 4곳에 대한 지정 결정을 강행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지난 20일 마감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의 방침은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이 정해진 만큼 여성경쟁 선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천이 곧 당선이나 마한가지인 탓에서 사실상 여성 의원 4명을 내리쫓겠다는 점에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해당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해 온 남성 후보들의 출마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악율한 컷오프를 얹어줬다”고 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공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시당은 지난달 20일 운영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광주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 등 4곳을 여성특구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 중 서구 제3선거구와 광산구 제5선거구는 현직 남성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여성특구로 전환한 사례다.

광산구의 경우에는 당초 제4선거구를 지정했다가 과거 12년 동안 여성과 청년에게 할당된 지역구라는 지적에 하루 만에 제5선거구로 변경하면서 원칙 없는 여성특구 지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남구 제2선거구 출마를 준비해 온 한 예비후보는 여성특구 지정 이후 아예 출마 없이 선거구인 제1선거구로 지역구를 옮겨 자격심사 신청을 한

사례도 이어졌다.

서구 제3선거구의 이명노 의원은 재선을 준비하던 중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특구로 지정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년 경쟁 선거구가 있었지만, 오는 6·3지방선거에는 여성특구만 있을 뿐 청년 경쟁 선거구는 사라지게 됐다.

시당은 청년특구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청년경쟁 선거구는 현직 의원 당선무효, 사퇴, 불출마, 직무대행 등 특수한 사유로 지정됐다”며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청년경쟁 선거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정치참여 확대 취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년 제한경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여성전략특구 지정이 정책적인 논의가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여성특구 지정에 앞서 적절한 평가 절차와 젠더 전문성을 갖춘 후보 발굴이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선거 준비 기간을 고려한 사전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한 여성특구 4곳에 대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이 평이한 수준으로 접수됐다”며 “자격심사를 마친 뒤 공천신청까지 완료되면 최종 예비후보자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방첩사,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단절”

국방장관, 군 정보·수사 기관 방문 첫 업무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해체를 앞둔 방첩사령부에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는 연내 해체를 앞두고 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될 전망이다. 인사정보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각 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방첩사 개혁, 정보사 개혁, 방첩수사원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과 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준비 상태와 세부 계획

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정보사에는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박정훈 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단식 7일째’ 장동혁, 건강 악화

국힘, 강제 이송 거론...이준석 “결기 증명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지 21일로 7일째를 맞은 가운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당내에서 ‘강제 이송’ 등 출구 전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산소포화도 급락으로 의료용 산소보생기를 착용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해의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농성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라”고 호소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아당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나는 여기

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자필 글을 올려 완주 의지를 다졌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사 출신 서명욱 의원은 “뇌 손상까지 우려되는 단계”라며 본인 거부 시에도 긴급 후송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사흘간 동조 단식을 벌였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단식을 중단하며 장 대표 설득에 나섰다. 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전환 등을 논의했다.

한편 ‘당원계사판 사태’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친한계와 친장계 모두 “단식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민주,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착수

성추행 의혹·딸 축의금 논란...‘제 식구 감싸기’ 비판 차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전격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두 의원 모두 정청래 대표 측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당내에서 제기되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직권조사 착수 사실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인정될 경

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நட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

혼식을 치르면서 피갑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최 의원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당내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준석·강선우·김병기 의원 등이 의혹에 휩싸였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윤리심판원장이 직권 결정 사안을 당사자 통보도 없이 유튜브 등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이 있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언론과 여당의 공격이 음해와 매도였음이 명백히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